

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현장에 구체적인 기준을 즉시 제시·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☐ 8.29.(토) 매일경제, “[사설] 노동법 쟁의기준을 구속력 없는 지침으로...문제 해결엔 한계”
조선일보, “[사설] 전당대회 싸움엔 거침없더니 국민 삶 챙길 때는 몸 사려”
- ☐ 8.28.(금) 헤럴드경제, “노동법 쟁의 기준 지침으로 즉시 적용”
뉴시스, “노란봉투법 쟁의기준 결국 시행령 대신 지침...내주 공개”

2. 설명 내용

- ☐ 정부는 전문가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, 노동쟁의 대상·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을 예방·해소하고,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적·구체적 방안으로 시행지침을 통한 규율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음
- ☐ 지침은 행정기관이 법령 해석·운영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기준으로,
 -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례 등을 담을 수 있고, 법령의 추상적인 규정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,

○ 입법예고,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법령 제·개정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음

□ 지침은 정부의 노동조합법 해석·운영에 대한 일관된 업무처리 기준이 되므로 실질적인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,

○ 이에 기초한 행정기관의 일관된 법 적용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 사례가 축적됨으로써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함은 물론, 향후 법원 등의 사법적 판단 시에도 주요한 해석 기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

□ 정부는 지침 기준과 내용에 따라 일관된 법 해석·운영 및 현장 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규범으로 기능함으로써,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에 안착하여 안정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	책임자	과 장	강승헌 (044-202-7611)
		담당자	사무관	서관범 (044-202-7609)

